

## 20대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

#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빛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20개 단체 · 가나다순)

# 토론회 순서

##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 단체 대표자 인사

##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사회학과)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처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빛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사회학과)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초토론(각 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 새누리당 : 불참
-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 목차

## 주제발표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비교·평가 (종합) 청년유니온 정준영 총선기획단장	5쪽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 청년 주거 공약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처장	25쪽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 청년 일자리 공약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35쪽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 청년 부채(금융) 공약 빛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45쪽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 고등교육 공약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51쪽

## 지정토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59쪽
국민의당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60쪽
정의당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61쪽
노동당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62쪽
녹색당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71쪽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74쪽



#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비교 · 평가 (종합)

청년유니온 총선거획단 (정준영 정책국장 · 김지훈 조합원)

## 1. 비교 · 평가의 대상과 방법

○ 이 작업의 목적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청년정책에 대해 가진 기본 입장 그리고 정당마다 직접 ‘청년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들을 비교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임. 단순한 배점으로 점수를 매겨 위계를 두기 보다는 각 당의 견해가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함.

○ 비교 · 평가의 대상은 원내외 7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으로 정함.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원내외 다양한 정당의 정책공약까지 함께 비교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각 당의 답변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하였거나 정책공약집에 수록되어 있는 청년 관련 정책공약 자료로 크게 두 가지이고,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표 6]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비교 · 평가에 활용된 자료 목록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6. 3. 14.)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 (‘16. 3. 16. 공문)
- ▶ 각 정당,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16. 3. 21. ~ 23.)
-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6. 3. 18.)
- ▶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16. 3. 18. 보도자료)
- ▶ 국민의당,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청년공약 발표” (‘16. 3. 7. 보도자료)
-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16. 3. 15.)
- ▶ 노동당, “[분야별 정책] 청년” (‘16. 3. 7.)
- ▶ 녹색당,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 민중연합당, “흙수저 방지를 위한 5대 청년 공약” (‘16. 3. 24. 보도자료)

○ 주거·고용·부채·교육의 구체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교·평가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각 당이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청년수당’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책 흐름에서 각 당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밖에 세부분야로 자세히 다뤄지지 못한 영역에서 각 당이 가진 견해는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볼 것임.

## 2.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비교분석

○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넷)는 아래와 같이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을 마련함. 요구안의 구성은 그 자체로 종결·완결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취지에 맞게 청년넷에 참여하는 20개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전체 12가지로 구성된 정책요구 항목은 각 당의 견해를 확인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음.

[표 7]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20대 국회,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정책”

NO	분야	정책 내용	정책 대상
1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시간제·저임금 노동자
2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주거독립 청년가구
3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 원 x 12개월	구직자·실업자
4	일자리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채용	구직자·실업자
5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저소득 노동빈곤 청년
6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이직 희망 노동자
7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 장기연체 채권 매입·채무조정	채무자·학자금 대출자
8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대학생
9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연구환경 개선 “인분교수방지법”	대학원생
10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모든 시민
11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까지 보장	만 17~24세 (법적 청소년)
12	제도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	모든 청년

※ 자료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6. 3. 14.)

○ 평가대상인 7개 정당에 총선청년네트워크가 보낸 공개질의에 모든 정당이 답변함.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넷이 질의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입장’ 모두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정책공약집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발췌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여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회신을 보내왔음. 따라서 청년넷의 질의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새누리당은 모두 ‘무응답’ 처리함.

※ 네트워크가 질의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한 답변은 따로 분석할 계획.

○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의 경우, 청년넷의 정책요구를 수용하는 정도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이 나타남. 물론 모든 정당이 수용하는 항목에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음. 청년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좋고 수용하지 않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단순히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당이 질의내용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며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임.

[표 8]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당 답변 비교 (새누리당은 모두 무응답)

※ ○ = ‘수용’, △ = ‘부분수용’, X = ‘수용할 수 없음’을 뜻하며 각 정당의 답변에 따름.  
\*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작성자가 새로 분류한 ‘실제 입장’은 괄호 ‘( )’ 안에 따로 표시.

정책요구 항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2020년 달성. 최저임금법 개정하여 한시적 인상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최저임금위가 범위 안에서 결정	△ 군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현재 인상을 2021~22년이면 1만원선 예측. 최저임금 위반하거나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 처벌 강화 필요	○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 90% 감액 허용하는 현행법도 개정되어야. 최저임금위의 논의과정도 공개되어야.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	○ 생활임금을 사회 전반에 도입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성별, 고용형태 구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화	○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책임. (임금채권기금 활용) 영세자영업자 직접 지원 혹은 세금 감면 실시.
공정임대료 제도로 월세비용 인하	○ 주거권 강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준사법적 권한의 분쟁조정위 설치, 임대등록제 등	○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의 임대료도 관리하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처	○ 전월세 상한제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약 제시. 임대차 등록제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서, 공정관리비,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은 것으로 정하는 것	○ 표준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	○ 지역별 임대료 상한제.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부터 우선 실시

청년 구직지원수당 (월 50만 원 * 12월)	○(△) 취업활동지원금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6개월*60만원*5 만명) 청년내일찾기패키 지 확대 개편	○(△) 후납형 구직수당: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통해 후납	○ 청년디딤돌급여: 월 50만원 최대 12개월, 1년 총액 최대 540만원. (6개월째부터 2개월에 10만원씩 감액)	○ 방향 동의	△ 정책취지 동의하나 저성장 시대에 맞는 기본소득 주장. 만15세 이상 청소년·청년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우선 지급.	△ 국가 실업급여 제도 :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학생들에게 최대 400만원(약 4개월) 실업급여 지원. 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용.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정원 5%)	△ 민간 대기업은 우선 한시적으로 3%	△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 공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	○ 할당 내 할당. 여성, 지방대 및 전문대, 고졸 등 기회균등채용 함께 도입.	○ 방향 동의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가 입장	○ 정책목표 공감, 하지만 결국 중·장년이 된 미래의 청년을 위협하는 모순적 제도가 될 우려.	○
일하는 청년동장 전국 확대 시행	무응답	○ 소요자원 조달과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직접 지원의 당사자 친화성. 저소득 일자리 보완하는 제도	○(X) 노동당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정책목표 공감, 검토 후 수용. 한편 근로상태 노동자라는 대성설정의 한계	X 저축 장려보다는 직접 소득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 근로장려세제 청년 1인 가구 적용 공약 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이직까지 확대	○(△)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후 3개월 지나면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	○(△) 급여 수급기간을 비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제한	○	○	○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기금 조성 위해 적정규모 산정과 기타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 기해 검토	X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약 (2.7% → 1.5%)	○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 규제,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 및 추심 금지, 부실채권 매입 탕감, 금융복지센터 설치.	○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부채 탕감, 대학등록금 무상화로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 폐지 (연구목적으로만 대출 제한)	○	○ 등록금 부채 탕감하자는 안 제시. 최소한 결혼연령까지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부담해소 해야.
반값등록금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 세액 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검토	○ 사용처 불분명 입학금 폐지, 대학별 등록금 심사위원회 설치 공약 제시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공약.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제정, 내국세와 법인세 일부로 재원 확보.	○ 방향에 동의하며, 노동당 정책은 대학등록금 무상화.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	○ 대학통합네트워 크(공동학위대학) 구축 정책 주장.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토론 선행 필요.	△(○) 등록금 1백만원 상한제 실시 공약 제시. 중간단계에서 반값등록금. 등록금 자율화 폐지.
대학원생 인권실태 연구환경 개선	○ 든든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대출 대학원생 확대는 검토	○	○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까지 실행해야	○	○	○ 연구원 대학 포함 모든 학교·공공기관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대학원생에게도 든든학자금 시행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	○	○	○	○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음	시민기본권의 핵심인 노동인권교육 제도화까지 공약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 설치.	노동인권교육을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의무화.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포함.
선거권 만17세, 피선거권 만18세까지 보장	△	△	△	△	○	△
	선거연령 만18세부터	장기과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입장에 찬성	선거권을 입영과 혼인 등을 할 수 있는 만18세까지 확대(당론). 그 이상은 당내 논의 진척되지 않음.	선거권은 '부모 동의 없는 취업가능연령'에 맞춰 만 18세, 교육감 선거권은 만 16세,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 없어야.	선거권 만 16세(중등교육 이수 시점), 피선거권 만 19세, 정당가입 만 13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 18세부터 보장하는 공약 제출.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낮추자는 입장 검토.
청년기본법 제정	○	○	○	○	X	○
	청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 개편	미래세대기본법 제정 공약 제시			사회문제는 세대 경계의 인지로 풀리지 않음. 기존 복지 수혜자들과의 수혜경쟁 우려. 기본법 제정은 사회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귀결시켜 전체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여지.	

○ 따로 평가가 진행되는 주요 분야를 제외하면 크게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의 세 가지 항목에서 정당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남. 앞의 두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으로 각각 '구직기간 소득보장'과 '노동연계·자산형성 소득지원'의 성격을 가짐.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

### 1) 청년 구직지원수당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비교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구직지원수당을 지급하자는 청년넷의 정책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와 결합된 '취업활동 지원금' 정책을 제시함. 금액과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실업부조 성격의 표준적인 정책 설계라는 측면에서 무난함. 국민의당은 구직 과정에 먼저 지원하고 취업한 이후 고용보험료로 후납하도록 하는 '후납형 구직수당'을 내놓음. 포퓰리즘 논란과 재원 마련 문제를 피하는 기술적인 정책 설계가 눈에 띄지만, 청년의 권리와 복지제도에 대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정의당의 정책은 보편적인 실업부조를 실업급여Ⅱ로 도입하는 실업안전망 틀 안에서 '청년디딤돌급여'라는 이름의 청년 지원프로그램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제도 설계 측면에서 완결성이 돋보임.

○ 민중연합당은 기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함. 졸업예정 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구상임.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실업부조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을 모색했으나, ‘고용보험’이 가지는 사회보험 성격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 노동당은 ‘방향에 동의’한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답변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결국 구직활동 전제의 청년수당보다는 모두에게(당연히 청년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임. 노동당은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함. 관련해 녹색당은 모든 시민에 대한 전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단계에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함.

○ 노동당과 녹색당의 기본소득과 나머지 정당들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서 출발함. 우리는 기본소득과 기존의 제도를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대립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거나 논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기본소득 구상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에 마주해야 함.

○ 그런데 저성장 시대라는 구조적 진단과 노동시장 중심으로 전 생애과정을 기획하는 일자리 중심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즉 노동에 종속되지 않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의 여지를 열어두더라도, 당장 청년의 구직기간에 나타나는 ‘특수한 정책수요’는 그것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음. 노동의 종말을 곧바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함.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로 소득을 보장 하듯, 청년을 비롯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직지원수당으로 표현되는 실업부조의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함. 이것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성격의 모든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임.

## 2)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비교

○ 저소득 청년노동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금액 공공재원을 함께 적립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2개 정당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보임.

○ 노동당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노동연계형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책으로 답변을 대신함. 한편 민중연합당은 저축 장려가 아니라 직접 소득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를 청년 1인 가구에게도 적용하자는 입장임.

○ 근로장려세제를 청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청년넷의 정책요구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나, ‘매칭 저축’이라는 제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소득을 지원했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결국 이는 다른 정책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합성을 따져 토론해볼 사안으로 보임.

### 3)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비교

○ ‘청년’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청년의 기본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보임. 이것은 개별 항목에 대한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 ‘청년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세대’라는 기준은 복지제도의 설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한계를 가지는가, ‘청년’이라는 정책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문제임. 청년을 특수한 계층 혹은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충분히 토론해야 할 질문을 녹색당이 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청소년 · 여성 · 노인과 같이 종합적인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가진 다른 사회집단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과 제도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좋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녹색당이 보론의 형식으로 전해온 답변을 붙임.

#### [표 9] ‘녹색당 답변의 보론’ 발췌 (강조는 작성자)

“질의서가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녹색당이 청년정책과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저희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녹색당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다른 사회 계층과 구별되는 특별한 취약 계층 혹은 다른 사회 계층보다 더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다루는 이유는 이 사회가 구체적으로 마주한 문제적 상황, 예컨대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기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축소 등의 문제를 대응할 미래세대에게 시민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전무한 현재의 청년세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려의 지점이지, 그 특수성이 그 자체로 특별히 취약한 계층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녹색당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보편적 시민주체로 호명하고, 초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3. 각 당이 발표한 청년 관련 정책공약에 대한 총평

1) 새누리당 : 청년·중장년들의 가슴에 품은 열정이 무럭무럭 열립니다.

[표 10] 새누리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내수산업 살리기	-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미래성장동력 육성	-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 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
우리가족 일자리 (청년·중장년)	-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 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 - 청년 국제인턴 확대 -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살리기	-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ICT 카페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우리가족) (청년)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 청년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 청년기본법 제정
주거안정	-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배려나누기 (사회적 약자)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 및 소득을 합산한 고용보험 적용
희망사다리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확대 및 전문 대학 특성화 -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청년취약계층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원
튼튼안보	- 현역병 입영적체 조기 해소 - 군복무 기간이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동원 및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
공정사회	- 공공기관 인사청탁 근절 : 인사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 자료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6. 3. 18.)

○ 새누리당은 청년넷의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정책공약 자료집에 수록된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발췌해서 보내왔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위의 [표 5]와 같음. 대표공약은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임. 집권여당의 청년 관련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수준의 지엽적인 정책에 불과함. 청년 국제인턴 확대는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K-mOve 해외인턴 사업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해외에 나간 청년들의 노동·생활 여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함.

○ 2015년 새누리당의 당론이 그러했듯 총선 정책공약도 큰 그림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 경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을 보이는데,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가 되던 임금피크제는 도입되었으나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지 않았고,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최악의 상황임.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평가는 무엇인가? 정부·여당의 기존 정책에 청년들이 제기했던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정책공약이라 총평함.

## 2) 더불어민주당 :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표 11] 더불어민주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청년 일자리 4대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li> <li>-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li> <li>-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와 3同 원칙 입법화</li> <li>-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li> </ul>
청년 복지 3대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지원 제도 도입</li> <li>-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 환경 개선</li> <li>- 사병월급 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li> </ul>
청년 교육 3대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li> <li>-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li> <li>- 취업에 있어서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균형선발제 의무화 추진</li> </ul>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16. 3. 18.)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은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라는 좋은 슬로건에 비해 내용이 아쉬움. 일단 취업활동 지원금은 표준적인 설계를 보이는데, 청년수당 사업이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재원 문제에 적절한 대책을 먼저 내놓지 않아,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청년일자리 공약에서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나열하고 있는 수단들은 하나하나 ‘정답’에 가깝지만 더 세밀한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반복되는 ‘거창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짐. 정당들 중에서 가장 크고 구체적인 ‘숫자’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제1야당다운 정교함은 보이지 않음. 1년에 단 5만 개의 일자리라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함.

### 3) 국민의당 : 청년희망프로젝트 : 공정한 출발

[표 12] 국민의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청년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li> <li>-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li> <li>- 청년구직자 인권보호</li> </ul>
청년학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최저임금 보장</li> <li>-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li> <li>- 대학입학금 폐지/등록금 심사제도 도입</li> <li>-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li> </ul>
청년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국고보조금 10% 청년사업 할당 의무화</li> <li>-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li> <li>- 청년연령 조정</li> </ul>

※ 자료 : 국민의당,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청년공약 발표” (‘16. 3. 7. 보도자료)

○ 국민의당의 청년공약은 대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이 특징임. 청년구직수당은 ‘후납형’으로 설계해 여러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청년 당사자들에게 현실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됨.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정책이나 인권침해 압박 면접을 없애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다른 정당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성 있는 공약임. 학자금은 이자율을 경감하자는 접근을 보이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제시함.

○ 문제는 국민의당의 정책공약들에 ‘청년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제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당장의 합의를 이끌기 쉽다는 이유로 ‘협소한 실용주의’의 함정에 갇히면 정책이 다음 단계로 확장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음.

### 4) 정의당 : 청년의 다른 삶을 위한 정의당의 스무 가지 대안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표 13] 정의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더 많은 청년 일자리와 공정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할당제 실시</li> <li>- 다양한 기회균형채용</li> <li>- 취업청탁 금지, 표준이력서 사용</li> </ul>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li> <li>-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li> <li>-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li> </ul>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시 퇴근법 도입</li> <li>- 모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li> <li>-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li> </ul>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폐지</li> <li>-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도</li> <li>-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li> </ul>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과 인간다운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 공정임대로 실현</li> <li>-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li> <li>-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li> </ul>
진짜 반값등록금, 정부책임 대학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li> <li>-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대표성 확보</li> <li>- 정부책임형 대학구조개혁</li> </ul>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20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설치</li> <li>- 풀뿌리 청년 활동지원</li> </ul>

※ 자료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16. 3. 15.)

○ 정의당은 20개의 정책공약을 통해 그간 청년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책들을 상당 수준 반영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세부 정책목표에 복지국가의 비전을 담으려는 노력도 돋보임. 전체 구성에서 가장 완결된 형태라고 총평하고, 재원 마련 문제에서도 증세 논란을 피해가지 않는 점도 책임 있는 태도임. ‘청년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디딤돌급여 정책도 모든 세대를 위한 보편적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틀 안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임.

○ 그러나 결국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정치적 힘’이라는 측면에서 원내 네 번째 정당 정의당의 청년공약에 대한 진짜 평가는 정책 외적인 것에서 이루어짐.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은 ‘모범답안’이 거꾸로 버거워 보이는 불안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함.

## 5) 노동당 :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을

[표 14] 노동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소득보장정책: 모든 청년에게 100만 원 이상의 소득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 월 30만원과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li> <li>- 대학등록금 무상화</li> <li>- 청년 생계비 절감</li> <li>- 청년부채 탕감</li> </ul>

알바 편에 선 근로감독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시정권고' 폐지하고 감독관에게 처벌권 부여 -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

※ 자료 : 노동당, “[분야별 정책] 청년” (‘16. 3. 7.)

○ 노동당은 우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전환점의 하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공유하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제안함. 노동당이 분야별 정책으로 정리한 청년공약은 다른 정당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책적 입장에 근거해 ‘소득보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돋보임. 초기 단계의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노동소득 증대 등을 통해 청년에게 100만 원의 구체적인 소득효과를 약속하고 있음. 대학등록금이나 부채탕감 정책도 일종의 소득정책으로 제시함. 전반적으로 특별히 ‘청년을 위한 것’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중에 청년에게 큰 효과를 가지는 정책들을 청년 분야 공약으로 구성함.

○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기본소득 등의 공약이 전부 하나의 그림에 제시되었으나, 단계적인 실행전략이 보이지 않음. 소요예산을 모두 합치면 막대한 금액(기본소득 제외해도 13조 1천 645억 원)이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발생함. 재벌증세를 전면에 건 조세재정개혁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짐.

## 6) 녹색당 :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계약 맺기

[표 15] 녹색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청년에게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배당 실험의 확대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청년의 정치적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 - 총선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도 19세도 확대하겠다.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 청년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 고등학교 등 청년·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 -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 청년세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녹색/지역순환경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등, 청년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군대 제도를 개혁하겠다.

※ 자료 : 녹색당,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청년넷의 정책질의를 녹색당이 보론으로 붙여 답변한 내용처럼, 녹색당은 청년문제 혹은 청년정책에 대해 다른 정당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음. 청년을 ‘특별히 취약한 사회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주체’의 하나로 호명한다는 것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이임.

○ 문제는 녹색당 또한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청년을 특별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임. 녹색당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청년배당 정책도 같은 맥락임.

○ 그러나 (청년문제에 대한 녹색당의 인식을 전제한다면) 어째서 기본소득의 도입 1단계에 농·어민, 장애인, 노인, 청소년과 함께 ‘만 29세까지의 청년’에게도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나열된 대상들에 ‘청년’이 포함되는 그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대상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녹색당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다른 사회 계층과 구별되는 특별한 취약 계층 혹은 다른 사회 계층보다 더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리적 입장이 ‘청년부터 시작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7) 민중연합당 : 흡수저 방지를 위한 5대 청년 공약

[표 16] 민중연합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확대 : 고등교육 예산 GDP 1% 편성</li> <li>- 등록금 자율화 폐지</li> <li>-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 규제</li> <li>-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참가 보장</li> <li>- 과도한 대학 적립금 적립 규제 및 법인의 법정부담금 100% 납부 강제</li> </ul>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 고용보험에 가입</li> </ul>
결혼 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할 경우 해당 대출 전액 탕감</li> </ul>
근로장려세제(EITC) 청년 1인 가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가구는 현 EITC 제도를 개선하여 19세 이상으로 개정</li> <li>- 단독가구의 최대 지원 금액을 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li> </ul>
국회의원 할당제·기탁금 국가보장·18세로 피선거권 인하 (청년 정치진출 3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국회의원 20% 할당제 실시</li> <li>- 청년후보 기탁금 등 국가 보장</li> <li>-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인하</li> </ul>

※ 자료 : 민중연합당, “흡수저 방지를 위한 5대 청년 공약” (‘16. 3. 24. 보도자료)

○ 민중연합당의 청년공약은 주요 분야의 정책에 대해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등록금 정책은 100만 원이라는 상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기존 ‘반값등록금’과 차별성을 드러내고, ‘청년수당’은 학생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은 ‘결혼 시’라는 요건을 덧붙였음.

○ 그러나 프랑스 사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100만 원’의 등록금 상한 기준이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에도 적합한 것인지, 왜 100만원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면밀한 검토가 보이지 않음.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지급 정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본래 특성에 맞게 그것대로 강화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 어떤 안전망과 지원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향으로 보임. 기존 대안들과 구별되는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공약의 기본요소인 ‘합리적인 근거’를 희생시켜선 안 됨.

#### 4. 결론

○ 새누리당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7개 정당을 한줄 위에 나란히 두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에서 뽑아 정리한 청년 관련 정책공약의 내용을 통해 기본 입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한국노총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참고하여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여당의 견해를 볼 수 있음.

[표 17]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중 ‘청년 특화’ 항목

질의 항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청년고용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할당제(공공부문 5% 확대, 민간대기업 3% 도입, 이행장치 마련)</li> <li>▶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 일정 비율 청년고용 의무화</li> <li>▶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li> <li>▶ 청년 실업부조 도입</li> </ul>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청년수당은 <b>신중한 검토 필요</b>	<b>동의</b> 청년고용문제는 정부 결단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b>동의</b>	<b>동의</b>

※ 출처 : 한국노총,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주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중심으로 각 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봤음. 정당의 노력에 넉넉한 점수를 주기에는 청년의 현실이 너무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공약이 아니라 그것이 배치되는 큰 그림임.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총평했을 때 전반의 방향에서 청년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나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음. 기본소득이나 구직지원수당이나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청년 수당’으로 통칭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공통점 또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나타남. 저성장 시대 개막, 산업구조의 변화, 불안정 노동의 확대, 불평등의 심화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현실로부터 약자의 상징이자 시민의 다른 이름인 ‘청년’을 위한 정책 또한 패러다임 수준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역대 최악의 청년실종 · 정책실종 ‘깜깜이 선거’라는 청년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디 청년의 구체적인 삶이 담겨 있는 정책선거가 되길 촉구함. 각 후보와 정당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승자와 패자만을 남기는 전쟁이 아니라, 청년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회적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평가를 마침.

<끝>

## [참고자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세부내용

### ①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 정책목표

-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 월급 2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소득 증대
- 가장 아래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 ■ 정책개요

-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시급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 최저임금 차등책정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액 심의 근거에 가족부양 생계비 신설
-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대폭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영세자영업자 대책 병행

### ②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 정책목표

- 청년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 경감
- 심각하게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기울어진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개선
- 공정한 임대시장 형성과 임대시장의 주체인 임차인 · 임대인 · 중개인의 사회적 합의 형성

#### ■ 정책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중위 40번째 또는 50번째 백분위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 연간 임대료 상승률 기준으로 하여 인상 과열지구(15% 이상 인상)에 공정임대료 우선 도입
-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및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임대료사정위원회 설치하여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및 안정적 도입 권장
- 지역별 임대료사정관 도입하고 파견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유도

### ③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 50만원 x 12개월

#### ■ 정책목표

- 장기실업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구직활동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향상

#### ■ 정책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15~34세)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자'나 단기고용을 전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청년 구직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공공고용서비스에 연계
- 구직지원수당은 한 사람에게 가장 12개월까지 매월 정액으로 50만원(중위임금의 25%)을 지급
- 졸업 혹은 중퇴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일정한 기간(3개월 혹은 6개월)을 초과하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취업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조건

#### ④ (일자리)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 신규채용

##### ■ 정책목표

-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고용책임을 외면한 재벌·대기업과 경기침체에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제도적으로 할당

##### ■ 정책개요

- 청년고용할당제를 고용여력이 있는 민간 기업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을 5%로 강화
-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신규채용
-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 ⑤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 ■ 정책목표

-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저축은커녕 부채상환도 버거운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자산 형성을 지원
- 기업의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보조하여 단기고용을 창출하는 청년고용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정책을 확대

##### ■ 정책개요

- (서울시·경기도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80%(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청년(15~34세) 노동자가 근로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공공재원과 민간기금으로 1.5배의 금액을 매칭 하여 저축
- (예시)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5만원이 더해져 3년 만기로 이자까지 1,080만원 자산 마련
- 계약직 비율이 높고 근속이 짧은 청년의 노동현실을 고려해 1년·2년·3년 만기프로그램으로 다변화

#### ⑥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 자발적 이직까지

##### ■ 정책목표

-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현행 고용보험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안전망에 포괄
- 청년노동자들이 소위 '블랙기업'의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일 없이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을 보장받으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정책개요

-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 대상 확대)

#### ⑦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장기연체 채권 매입·채무 조정

##### ■ 정책목표

- 학자금 대출과 규제되지 않는 고금리 제2금융 대출로 인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위기에 있는 청년들이 악성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

## ■ 정책개요

- ‘청년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층(15~34세)이 보유한 3년 이상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단기에 채무 조정
- 신용위기를 경험한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⑧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 ·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 ■ 정책목표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기타 입학금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 ■ 정책개요

-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5년 약 3조 9천억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⑨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 · 연구환경 개선 : “인분교수방지법”

### ■ 정책목표

- 고등교육연구환경의 합리화·선진화는 한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분교수 사건” 및 각종 대학원생 기본권 침해의 반복에서도 볼 수 있듯 정책적인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대학(원)의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미래투자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그 첫걸음으로 ①반복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②대학원생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개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 및 반영.

### ■ 정책개요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인권센터 운영에 교수·학생·전문가의 균등한 참여 보장
- 대학원생 권리장전 체결을 포함해 대학원 인권개선 노력을 교육부 대학(원) 구조개혁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
- 고등교육소청심사위에 대학원생 및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가해 교수의 ‘실질적 사면’ 방지
-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을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
- 대학 및 정부 고등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실효적으로 보장
- 각 대학원 학과 별 주요지표(장학금 지원 정도, 학위취득 소요기간, 중도포기비율 및 사유, 졸업 후 첫 진로 등 미국주요대학에 준하는 정도로) 공개 의무화, 대학원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이 지원하는 “깜깜이 진학” 방지

## ⑩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 정책목표

- 현재의 시민교육은 ‘국민통합’, ‘인성교육’, ‘이념편향’ 논란에 머무르며 획일적 국가주의 재생산 또는 특정 진보이념 재생산 도구로 치부되는 편견에 머무르고 있음
-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계획·실행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담보함

### ■ 정책개요

-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의 의미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참여의 방법론을 밝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현행 초중등교육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및 관련 교과서, 국민통합 및 인성교육 관련 법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신규 민주시민교육과정 수립
- 민주시민 교육과정 수립 및 교과서 집필, 채택 과정의 열린 시민참여 보장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전체의 민주화 달성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의결권 보장 및 참여비중 확대, 지역사회 현안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실효적 정치효능감 체험의 기회 보장
- 민주시민교육 전달연수 상설화, 체계적 교육과정 수립 및 발전, 시민참여기구 운영 등을 위한 예산 보장,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⑪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까지 보장

### ■ 정책목표

-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피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행복추구권·참정권·자기결정권·사회참여권 보장

### ■ 정책개요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부터 선거권(투표참여)을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보장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

## ⑫ (제도) 「청년기본법」 제정

### ■ 정책목표

- 청년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정책 분야나 행정부서의 칸막이로 나누지 않고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노동, 주거, 부채, 교육, 의료, 문화, 참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지만 청년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해법으로 ‘고용촉진’에만 갇혀 있음.
- ‘일자리확대’와 ‘취업지원’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소관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행력 있는 심의기구 구성
- 청년정책의 모든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확대

## ■ 정책개요

-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규정하고 기본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과 정책에 '세대 인지적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청년영향평가 시행
-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고 행정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를 통해 중장기·단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제발표

#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주거 정책공약 비교 · 평가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처장

## 1. 비교 · 평가의 대상과 방법

- 본 발제문은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청년주거공약’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임.
- 공약 자료는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와 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정당별 주거정책에 대한 보조자료로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각 정당별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와 3월 16일 진행된 ‘20대 총선 정당 서민주거정책 평가 토론회’자료 내용을 참고함.
- 정당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청년주거공약’이 부재한 경우 일반 주거공약의 내용을 참고함.

### [표 19]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비교 · 평가에 활용된 자료 목록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6. 3. 14.)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 (‘16. 3. 16. 공문)
- ▶ 각 정당,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16. 3. 21. ~ 23.)
-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6. 3. 18.)
-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년 20대총선 정책공약집.” (‘16. 3. 26.)
- ▶ 국민의당,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16. 3. 23.)
-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16. 3. 15.)
- ▶ 노동당, “2016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16. 3.)
- ▶ 녹색당,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 민중연합당, “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자료집” (‘16. 3.)
-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 서민주거정책 평가 토론회 자료집” (‘16. 3. 16)

## 2.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지난 3월 16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주요 정당 앞으로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음.

○ 공동요구안에 포함된 청년주거 정책제안 내용과 각 정당별 입장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20]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주거정책 제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제안 정책 :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중위 40번째 또는 50번째 백분위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 연간 임대료 상승률 기준으로 하여 인상 과열지구(15% 이상 인상)에 공정임대료 우선 도입
-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및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임대료사정위원회 설치하여 제도의 유연한 운영 및 안정적 도입 권장
- 지역별 임대료사정관 도입하고 파견하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유도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수용여부	답변 없음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주요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수용</li> <li>▪청년/대학생의 경우 소득은 취약한 반면, 학업·취업 등으로 단신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큼</li> <li>▪청년/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해 일반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청년대학생 주거 지원을 통한 직간접적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뿐 아니라 상가임대료도 관리하는 임대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당에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20대 총선에서도 공정임대료 및 전월세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li> <li>▪임대차등록제 도입으로 공정임대업자 및 공정중개사 등록,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으로 임대차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관리비 실현, 임대료 사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li> <li>▪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상한선</li> <li>▪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당의 월세 경감정책은 전월세 전환률 상한을 한 기준금리 2.5배 또는 6% 중 낮은 숫자를 취하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임대료 상한제,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부터 우선 실시해야 함.</li> </ul>

○ 질의를 보낸 7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중 새누리당만이 정책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나머지 6개 정당은 제안한 정책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힘.

○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청년가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개입임. 구체적으로 임대료 기준(공정임대료 도입)·공정임대시장 형성(임대차등록제)·분쟁조정기구 설치(임대료사정위원회 및 임대료 사정관 설치)로 볼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답신에서는 임대료 기준(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 도입)·공정임대시장 형성(임대차 등록제 도입)·분쟁조정기구 설치(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당(공정임대료 수용, 상가를 포함하는 임대차 조정위 설치)과 녹색당(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에서도 두 가지의 정책 기조를 담고 있음. 노동당에서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전월세 전환률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민중연합당에서는 대도시에 임대료 상한제를 우선 도입하는 의견을 제시함.

○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서는 민간 임대시장의 임대료 기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있음.

### 3. 정당별 청년주거정책 검토

#### 1) 새누리당

▪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노인 1~2인 가구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신혼부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단지	- 행복주택 5.3만호를 신혼부부 특화 10개 단지로 17' 까지 공급
▪ 대학생연합기숙사 공급	-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 2개소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 자료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6. 3. 18.)

○ 새누리당에서는 1·2인 가구, 신혼부부,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였음.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존 행복(공공·연합)기숙사를 개선한 연합기숙사 공급 공약 등 개별 공약의 내용은 좋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의 포괄 범위가 좁음.

○ 제시한 중 행복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특화단지 공급이나 대학생 연합 기숙사 공급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추진 물량이 600호에 그치고 있음.

○ 청년 등 주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민간시장 임대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별 한시적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주거공약은 후퇴한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공약이 편중되어 있음.

## 2) 더불어민주당

<p>▪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5%수준(106만호)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향후 10년간 13%수준으로 확대</li> <li>- 기존 원룸 외 1주택 2~4룸식의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까지 공급</li> <li>-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소형, 인텔리전스)을 매년 5만호 이상 공급하여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함.</li> <li>- 신혼부부 주거지원요건 중 대출액을 현실화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후 내집마련 소요기간(현행 7년)을 크게 단축</li> </ul>
----------------------------	---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년 20대총선 정책공약집.” (‘16. 3. 26.)

○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주거부문의 핵심 공약은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삶의 경향을 고려하여 셰어하우스를 기본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연기금 공공투자 방안을 통해 청년주거문제를 특정 세대내 문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환기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다만, 이 모델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조건(위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테이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보증금 1천만 원, 9평 기준 임대료 월 30만원) 입주대상자인 1인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의 지불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p>▪ 주거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법, 임대차보호법 개정 그리고 주거기본법 시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대료상한제도입, 계약갱신청구권도입</li> <li>- 준사법적권한의 분쟁조정위 설치</li> <li>- 임대등록제도입을 통한 임차인 선택권 강화</li> <li>- 전월세전환을 인하 등을 추진</li> </ul>
<p>▪ 임대시장 투명성 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도입 등을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만전</li> </ul>
<p>▪ 청년대학생 주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약속한 대학생 주거지원을 25%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노력 경주</li> <li>- 공공기숙사 지원 확대</li> <li>- LH의 전세임대사업 물량 확대 촉구</li> <li>- 대학생 전세자금 지원확대 및 &lt;누구나대출보증&gt;제도 도입을 통한 보증제도 개선</li> <li>- 셰어하우스 내지 SOHO형 임대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취업+학습+연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 강화</li> </ul>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2016년 20대총선 정책공약집.” (‘16. 3. 26.)

○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주거공약에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망라하고 있음. 특히 전월세안정 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등록제·전월세전환률 인하 등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20대 총선 공약이 단지 좋은 정책을 모아서 늘어놓는 ‘보여주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3. 국민의당

<p>■ 청년권익보호-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특별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li> <li>-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li> <li>-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 보장</li> </ul>
<p>■ 청년사회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정부차원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설치</li> <li>-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문제에 한번에 접근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li> </ul>

※ 자료 : 국민의당,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16. 3. 23.)

○ 국민의당의 청년주거공약은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공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주택공급안과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연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긍정적이나,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료 수준, 입주자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수익률 보장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 청년문제에 대해 개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 설치와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이 부재함.

<p>■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OECD평균의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다변화</li> <li>-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 추진</li> <li>-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 및 운영, 관리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li> </ul>
<p>■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계약갱신권 보장 및 임대료 과다인상 제한</li> </ul>
<p>■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제도 축소, 최종적으로 폐지 추진</li> <li>- 이사기간 불일치 주택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및 개선</li> </ul>

국민의당,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16. 3. 23.)

○ 현재 국민의당에서 정식 발행한 ‘20대 총선 공약집’에서는 ‘청년희망임대주택’ 및 ‘이사기간 불일치 주택자금 대출 제도’ 이외에는 주거정책이 부재함

○ 다만 ‘주거권네트워크 정당 주거정책 토론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혁신, 운영·관리에 협동조합 참여 장려, 계약갱신 청구권 1회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공개질의 답변서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

○ 그러나 청년주거정책을 비롯한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운영에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4) 정의당

<p>■ <b>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탈출, 인간다운 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 공정임대로 실현: 공정임대업자·공정중개인 육성, 안심증개포털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임대시장 형성</li> <li>-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li> <li>-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 관리비 실현</li> </ul>
---	--

※ 자료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16. 3. 15.)

○ 정의당의 청년주거공약은 공정임대료 도입을 통한 월세 부담 경감·월세 보증금 대출 등 핵심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지원·구조적 개선과 표준임대차 계약 의무 사용으로 관리비로 대표되는 임대차 분쟁예방 및 권리향상을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물리적인 주택공급을 벗어나, 청년주거문제를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1인 가구·저소득·주거빈곤·높은 월세 가구 비율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음.

○ 다만 사회적 임대시장의 형성의 경우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공정임대인의 비율, 사회적 임대시장의 임대료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시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 관련 법령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20대 국회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5) 녹색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주거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초년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 기존 신혼부부중심 정책을 넘어 비혼, 비임금 노동세대를 포괄하는 통합적 주거지원정책 구축</li> <li>-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균형적 공급</li> </ul>
--	--

※ 자료 :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녹색당 청년공약에 포함된 주거정책에서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의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고 비혼·비임금 청년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문제인식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통합적 주거지원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주거임대료 수준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기준의 표준임대료 도입</li> <li>-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li> <li>-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살아갈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자동연장제도(계약갱신청구권)도입으로 10년간의 주거안정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li> <li>-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li> <li>-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토지임대부주택 공급</li> </ul>

※ 자료 :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주거공약에 녹색당은 표준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민간임대시장 규제 및 주거안정화 정책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또한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6)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생계비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주택의 20% 수준으로 확대</li> <li>-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청년1인가구, 비혼여성, 장애인 등에게 우선공급</li> <li>- 기준금리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률 상한 규정</li> <li>- 계약 시점 보증금 인상률을 통계청 가계물가지수 혹은 연 2% 중 낮은 값으로 제한</li> </ul>
---	--

※ 자료 : 노동당, “2016 총선 노동당 정책공약집” (‘16. 3.)



○ 노동당의 청년주거공약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20%(약 374만호)로 늘리고, 이 중 30%를 청년 1인 가구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전월세 전환률 규제 강화를 통한 간접적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유도.

○ 노동당에서는 주거비를 청년 생계비 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통신비·교통비 절감과 더불어 생계비 10만원을 절감하고 기본소득·대학등록금 무상화 공약과 더불어 월 100만원의 소득보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득보장적 관점에서 주거비 부담완화를 제시한 것은 노동당의 전체 공약기조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전월세 전환률 상한을 통해 기대되는 주거비 부담 완화의 수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임.

## 7) 민중연합당

○ 민중연합당에서 발표한 ‘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자료집’에서는 청년주거 관련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거 분야 공약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의 부분적 공약을 확인.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내용은 확인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공약은 찾지 못함.

○ 공개 질의 답신 내용에서는 공정임대료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확인. 청년 및 주거 전반 공약에 대한 공약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를 보류.

## 4. 결론

○ 2018년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 상황에서 청년 문제는 곧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며, 주거문제는 청년의 삶의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문제임.

○ 2015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나온바와 같이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이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자가촉진정책’을 펴온 정부의 대응이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주거지원 정책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가구의 대부분은 규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 머물고 있음. 1인 가구·저소

특·임차 가구 등 청년을 대표하는 지표는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불공정한 현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없이는 근본적인 청년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움.

○ 따라서 청년주거문제는 ▲세대적 관점에서 벗어난 사회적 대타협의 정책 ▲자가 소유 중심에서 벗어난 세입자 중심의 정책 ▲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20대 총선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연기금 공공투자 방안을 통해 청년주거문제를 특정 세대내 문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환기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또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한 것도 그간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에서 청년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한 변화로 볼 수 있음.

○ 더불어 많은 정당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임대료 기준제시 등을 제시한 것도 청년의 가계부담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를 낮춰 청년 가구의 소득보장을 높이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청년 주거공약의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임. ‘청년’주거공약으로 ‘공정임대료 및 사회적 임대시장’을 제시한 정의당이나 소득보장의 관점을 보인 노동당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주거문제를 청년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 지점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임. 청년이 실질적인 정책대상이 되지 못한 사유는 연령·가구원수·부양가족·자녀수 등에 의한 가점제도에 의한 제도적 배제가 주요한 원인임. 또한 청년가구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입지조건에 대한 검토와 행복주택 공급과정에서 드러난 공급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공약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찾아보기 어려움.

○ 청년주거문제는 단기적인 처방, 혹은 분절적인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따라서 전체 청년정책 혹은 주거정책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함께 청년주거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배치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각 공약별로 배경, 목표, 실행 계획,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일자리 정책공약 비교 · 평가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 1. 머리말

○ 2016년 1월 알바천국에서 20대 남녀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해 소망과 걱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소식 1위는 청년실업률 감소(30.0%)였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로 볼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를 언급한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각 정당의 20대 청년 일자리 공약을 개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각 정당의 청년일자리 정책 비교는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와 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청년 일자리정책 없는 정당의 경우 정당의 일자리 정책을 토대로 유추했다.

## 2.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대한 각 정당 입장

○ 제안정책 : 공공기관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 정원 5% 청년 신규채용

### ■ 정책목표

-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고용책임을 외면한 재벌 · 대기업과 경기침체기에 ‘최후의고용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제도적으로 할당

■ 정책개요

- 공공기관에 적용된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부문 및 고용여력이 있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 시행(정원 5%)
-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표 1]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청년일자리정책 제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정당	수용여부	주요의견
새누리당	답변 없음	-
더불어민주당	부분수용	▲ 공공기관 5% 상향 ▲ 민간대기업 한시적 청년고용의무고용제 시행 - 정원 3%
국민의당	부분수용	▲ 한시적(5년간) 공기업·1000인 이상 대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 정원 5%
정의당	수용	▲ 19대 국회에서 제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 ▲ 할당 내 할당을 실시 여성·지방대 및 전문대, 고졸 등 기회균형채용을 함께 도입
노동당	수용	▲ 방향에 동의 - 부분적 개선효과 ▲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적인 해법
녹생당	수용	▲ 재벌·대기업과 정부가 창출하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접근적 차원에서 정책 공감. ▲ 방향에 동의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세대적 개념으로서의 청년이라는 특징 하에서 중·장년이 된 미래의 청년을 위협하는 모순적 제도가 될 우려. 추가적인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
민중정치연합	수용	▲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제도

※ 수용과 부분수용 관련해서는 정당에서 제출한 것을 최대한 참고

○ 질의를 보낸 7개 정당 중 새누리당만이 정책제안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개 정당은 제안한 정책에 대해 부분수용, 수용의 입장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까지 확대 방향에 대하여 수용.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동의 - 민간기업 규모에 따라 수용 분류)

○ 노동당과 녹생당의 경우 방향에는 동의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답변. 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하였으며, 녹생당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없음. (녹생당 공약 중 주 35시간 노동시간 법제화를 핵심으로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생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

○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3. 정당별 청년일자리정책 검토

○ 12.5%의 청년실업률(통계청)을 넘어(체감실업률은 20% 이상-김유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청년들이 마주칠 현실은 만만하지 않는다.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낮다. 청년들의 현실은 ‘일을 할 수 없어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하다’로 압축할 수 있다.

○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자진해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성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자산수입이 거의 없는 청년의 경우 노동을 통한 소득이 대부분임) 즉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정책이 중요해 보임.

○ 기업에 의존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질 뿐이며, 그마저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을 확대. 결국 민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가 필요. ‘저성장 경제위기 시대’ 최후의 고용주인 정부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 1) 새누리당

정책	세부내용
노동시장 관행 개혁	노동개혁 법안(4대 입법) 마무리. 양대 지침의 현장 정착
창조경제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	청년희망아카데미 서울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3년 내)
벤처기업 취업연계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하고, 졸업 후일정기간 벤처기업 근무.(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청년국제인턴 확대	해외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국제경험을 쌓는 기회 마련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개혁’ ‘창조경제’ 두 가지를 제시. 노동개혁의 경우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문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이며, 창조경제의 경우 그 형태 자체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여도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벤처기업 취업연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아닌, 벤처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마련해주는 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이라 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 K-mOve 사업의 경우 2014년 11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사무·서비스직(73%)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봉도 대기업 대졸 신입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현지 외국기업 진출자는 37% 수준으로 대부분이 현지 한인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데 약 2800만원 투입.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 정책)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한 재탕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2) 더불어민주당

정책	세부내용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분야, 사회분야,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분야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li> <li>▲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량 5% 상향, 일정규모 민간기업 매년 3% 이상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3년)</li> <li>▲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li> </ul>
청년창업 환경 개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창업활성화 지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 핵심 공약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보임. 창출할 일자리의 양에 비하여 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공공 기관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창출 한 일자리 중 계약직 등의 질 낮은 일자리 창출. - 장하나의원) 또한 민간부문에서 미이행시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 OECD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조건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및 로드맵이 보이지 않음. 종합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방향은 유사함.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 국민의당

정책	세부내용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 청년창업은 대부분 소규모 및 거래처의 정보획득의 어려움

공공구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공공구매시 청년 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스타트업의 활성화 지원,</li> <li>▲ 창업지원심사단에 청년기업가의 참여 확대</li> </ul>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한시적(5년간) 공기업·1000인 이상 대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500인으로 순차적 적용 - 정원 5%

○ 청년 10대 공약 중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창업지원을 제시하였다. 청년창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 자체가 미지수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판매처 및 거래처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지원, 제도전 기회를 위한 제도 등 종합적인 정책들이 필요.

○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민간기업의 제재방안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4) 정의당

정책	세부내용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미취업청년 신규고용</li> <li>▲ 청년미취업자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원, 준수하지 않은 기업 부담금 징수</li> <li>▲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시 기회균형채용 도입. 여성, 고졸이하 학력, 전문대와 지방대 출신 청년에 대한 차별 해소</li> </ul>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 수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재벌 사내하청 등 즉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하지 확대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증원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 청년 CEO 육성	새로운 고용모델로서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협동조합 전문경영인 양성

○ 더불어민주당과의 일자리 수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비슷한 정책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보다 긍정적인 점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통해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는 일자리의 질 부분을 보완하였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강제성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 실제 110만 수준의 청년일자리가 필요한 조건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시 수도권·대졸자·남성에게 1차적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보완 한 것은 의미 있음.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보인다. 앞에서 기술 했듯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및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 협동조합 청년 CEO육성제도의 경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 청년인턴 지원 외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노동당

정책	세부내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li> <li>▲ 최저임금 인상, 복지확충, 기본소득 도입 통한 소득보완</li> </ul>

○ 노동당은 청년실업 문제는 오직 주당 35시간 법정상한제처럼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공급을 비약적으로 늘릴 때만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였음. 부족한 소득부분에 대하여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

### 6) 녹색당

○ 녹색당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은 없다. 이는 세대적 개념으로 청년이라는 특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였음

### 7) 민중연합당

정책	세부내용
청년고용세 신설	재벌 사내유보금에 실질적인 과세방안 마련. 청년고용 등에 지출한 금액을 과세 제외하여 사내유보금 청년 고용재원 활용

○ 청년일자리 채용 마련을 위한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그 규모와 재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부분이 아쉬움.



## 4. 결론

- 청년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의 확대에 있음. 이는 일의 질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현재의 일자리 양적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 일자리의 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미래)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작으로는 최후의 고용주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취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에는 70% 수준의 이행에 그치는 등 현행법도 지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현원을 축소시 경영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제도적 모순점과 미이행시 제재할 수단이 약해서라고 보인다.
- 청년광장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5년의 이행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대형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에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행기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행기관 53개 → 49개 축소) 이 중 6곳의 경우 2년 연속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로통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또한 장하나의원이 지적했듯이 만들어진 일자리 중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조건에서 민간기업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확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까지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에 동의하였다.(규모와 비율의 차이 존재) 민간기업까지 확산에 대하여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접근은 잘 못된 생각이다. 지난 시기 재벌·대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적은 일자리, 50%에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보았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을 정도로 서민은 가난해졌지만,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800조가 넘어가고 있다.
- 대기업은 기간의 문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중정치연합이 제시한 ‘청년고용세’도입은 충분히 검토 할만하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많은 정당에서 제출하였다. 이는 OECD 최장 노동시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소득감소 문제와 임금체계의 문제 등 종합적 검토와 함께 이행을 위한 대한 정책 로드맵이 함께 제출 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삶의 안정이 우리사회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 청년일자리 또한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대한 요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당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자료] 청년고용할당제 이행현황 (2014, 2015년)

[표 1] 청년고용할당제 이행 현황

	공공기관	전체
정원	256,431	44,128
청년고용	13,031	1,518
청년고용률(%)	5.1	3.4
전체기관수	270	121
이행기관수	225	66
<b>이행기관율</b>	<b>83.3</b>	<b>54.5</b>

※ 출처 : 2014년 공공기관 청년신규고용 의미 이행 현황 (2015 고용노동부)

○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의무이행기관은 225개소(83.3%)로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으로 상승하였지만, 청년의무고용비율을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 의무기준 미달기관은 45개소로 신규채용 인원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26개소(4개소는 신규채용 실적 전혀 없음), 신규채용 인원이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이 19개소(14개소는 청년 신규채용 실적 전혀 없음)이다.

○ 공공기관은 그나마 80%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54.5%만 이행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고용 의무기준 미달기관은 55개소로 신규채용 인원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44개소, 신규채용 인원이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이 11개소이다. (49개소는 청년 신규채용 실적 전혀 없으며, 이중 22개소는 신규채용 실적 전혀 없다)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00 곳에서의 청년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100개 중 40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보고한 일자리 중 정규직이 아닌 유형의 일자리로 채용됐다. 정부의 '청년고용 현황 작성 지침'에 따라, 청년 채용자 중 정규직만 고용 현황으로 작성하고 단시간·계약직·인턴 등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실적으로 보고하였다. 허위로 보고 된 인원을 제외한 결과 3%에 미달 하는 기관의 수준 29개 기관에 달하였다. 만약 전체 기관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많은 기관이 적 발 될 가능성이 높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안으로, 기관장 연임과 성과급 지급에 중요한 기준 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터리로 집계되고 있다. 평가 등급을 바꾸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기관에 대하여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현황 분석 방법

-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실적 자료 요청
- ▶ 신청 한 860개 공공기관 중 218개 자료 미제출(25.3%) - 접수중, 접수대기중 등
- ▶ 대형공공기관(정원 1,000명 이상) 자료(61곳 기준)
- ▶ 일부 기관의 경우 비공개 또는 정보공개를 늦어지는 문제발생.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개시스템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

[표 2] 대형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이행현황

	2014 (이행율)	2015 (이행율)
이행기관 수	53 (86.8%)	49 (80.3%)

[표 3] 청년고용할당제 미이행기관

연도	미이행기관
2014년(8곳)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학교법인한 국폴리텍,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조폐공사
2015년(12곳)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원자력의학원

※ 국민연금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청년고용할당률 3%에 거의 근접

○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정과제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이행 기관이 확대되었다. 정부 스스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 결을 말하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 이행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부채(금융) 정책공약 비교 · 평가

빛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 본 발제문은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청년부채공약’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청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공약 자료는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와 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정당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청년부채공약’이 부재한 경우 일반 부채, 금융공약의 내용을 참고로 함.

## 1.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공동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입장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및 채무조정 관련 답변 요약, 청년부채 관련 인식정리

<학자금 대출 이자율만 낮추면>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선에서 정책 제시

<일반인 대상 오래된 부실채권 매입해서 해결>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 발표된 일반 부실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으로 해결

<학자금 대출부터 채무조정, 탕감하자>

○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은 학자금대출 탕감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 전액, 부분탕감

<구조부터 바꾸자>

○ 녹색당은 청년부채 관련정책은 없지만 적극고려 하겠다는 취지임.

[표 1]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금융정책 제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제안 정책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장기연체 채권 매입 · 채무 조정**

■ **정책목표**

- 학자금 대출과 규제되지 않는 고금리 제2금융 대출로 인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용위기에 있는 청년들이 악성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

■ **정책개요**

- ‘청년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층(15~34세)이 보유한 3년 이상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단기에 채무 조정
- 신용위기를 경험한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수용 여부	답변 없음	부분수용	부분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li> <li>- 학자금 대출 금리 2.5% 인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부채경감 정책 발표</li> <li>- 청년채무자 3년 이상 채권 신중을 기해 검토하겠음.</li> <li>-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부채경감정책 발표</li> <li>-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 신용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발표정책</li> <li>-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탕감</li> <li>- 대학생 대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에 공감</li> <li>- 청년신용회복기금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할 경우 등 록금 부채를 탕감</li> <li>- 학자금대출 탕감으로 대체</li> </ul>

[표 2] 정당별 청년 부채경감을 위한 정책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청년 부채 경감 정책	<p>&lt;대학 학자금&gt;  <b>대출금리 인하</b>                      2.7% -&gt; 2.5%</p> <p><b>기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거치 및 상환기간 추가 연장 허용</li> </ul>	-	<p>&lt;대학 학자금&gt;                      대출금리 인하                      2.7% -&gt; 1.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탕감</li> <li>- 전면조사 적극적인 채무조정</li> <li>- 학자금 대출 이자 취업이전 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li> <li>-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할 경우, 해당 대출 전액 탕감</li> <li>* 성소수자들의 혼인 포함.</li> </ul>
일반 금융 정책	<p><b>서민금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은행 10% 대출 상품 (중금리)</li> <li>-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서민금융진흥원 설립)</li> <li>- 채무자 압류 금지 금액 150만원 -&gt; 180만원으로 확대</li> <li>- 신용대출 119</li> <li>-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상각채권 원금 50% -&gt; 60%</li> <li>취약계층 70%-&gt;90%</li> </ul> <p><b>이자제한법</b>                      25% -&gt; 20%</p> <p><b>민영보험상품</b>                      헬스케어, 운전습과 보험상품 출시</p> <p><b>금융소비자</b>                      불완점판매 금지                      금융소비자 교육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강화</p>	<p><b>가계부채</b></p>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li> </ul>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과 추심 금지</li> </ul> <p>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li> <li>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li> <li>- 신용채무 개인회생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li> <li>-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 설치</li> </ul>	<p><b>서민금융</b>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p> <p><b>금융소비자</b>                      게이투자자와 소비자 보호</p> <p><b>민영보험</b>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민간의료보호법 제정</p>	<p><b>저소득층 악성무채 탕감,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 규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법과 이체제한법 이자 19.9%인하</li> <li>- 지역금융복지센터 설립</li> </ul>	<p><b>가계부채 축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와 이자제한법 통합</li> <li>이자율 최고한도 15%</li> </ul> <p><b>대규모 개인 부실채무 정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실채권 매각기준 법제화</li> <li>-채무탕감 (200만명)</li> </ul> <p><b>채무조정 제도의 개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면책제도 도입</li> <li>- 파산선고후 복권 10년에서 5년</li> <li>- 개인회생 5년에서 3년</li> <li>- 파산자 차별금지</li> </ul> <p><b>대규모 금융자본자산 자본보유세, 금융 사회화기금 조성</b></p> <p><b>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b>                      개인신용정보 보호</p>	-	

## 2. 정당별 청년을 포괄하는 금융 및 부채경감을 위한 정책 검토

### 1)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기본취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줄이는 것으로 청년부채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민금융,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 등 관계법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 특히, 민영보험상품 중 습관에 따른 보험이 이색적임.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을 이용한 의료체계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음.
- 실제 집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음.
- 다만,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한 부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경감에 대한 부분은 정책설계 없음.

### 2) 더불어민주당

-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경감 대책을 특별히 두지 않고 있음.
- 가계부채 감소 대책으로 1~3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부채에 집중. 청년층이 포괄되지 않음
- 서민금융에 대한 입장과 대부업 최고금리, 이자율 등 명시적인 제시가 필요함.

### 3) 국민의당

- 국민의당의 경우엔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청년금융&부채 정책을 대체하고 있음.
- 서민금융에 대한 인식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강조
- 특색으로는 최근 실손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민간의료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음.



#### 4) 정의당

- 정의당도 청년을 위한 부채경감 대책이 없음
- 일반 저소득 악성부채 탕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19.9% 인하, 지역 금융복지센터 설립으로 가계부채 및 금융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5) 노동당

- 노동당은 부채와 금융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부채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면조사와 채무조정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학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청년일반에 대한 정책이 없음이 아쉬움.
- 일반 가계부채 축소, 이자율 15% 제한, 부실채무정리, 채무조정제도 개혁
-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자본보유세, 금융사회화기금 조성등이 특별함.

#### 6) 녹색당

- 청년부채와 가계부채, 금융관련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제시하고 있음.

#### 7) 민중연합당

- 민중연합당은 가장 특색 있는 정책으로 결혼 시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청년 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일반 가계부채, 금융소비자 관련 공약은 없음.
- 결혼과 학자금 대출을 엮은 부분은 참신하지만, '결혼을 하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주겠다'는 논리로 인식될 수 있어. 결혼을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과 논쟁의 여지가 있음. 결혼과 무관한 정책설계가 바람직함.

### 3. 소결

- 청년부채는 학자금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문제가 악성화 되는 것은 생활/생계 대출로 인해 ‘채무늬’에 빠지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한계 있음. 청년부채 =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등식부터 제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가계부채 및 청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은 소득증대와 지출감소, 복지증대로 해소될 수 있는 영역임 에는 분명함.
- 그러나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생활/생계 부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잠식당할 수 있는 있음. 이를 감안하여 정당들은 전체를 보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나아가 금융자본의 이윤증가, 약탈적 대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금융/신용소비자로서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이 필요.

# 20대 총선 각 정당 고등교육 정책공약 비교 · 평가

청년참여연대 총선대응팀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1. 비교 · 평가의 대상과 방법

○ 이 작업의 목적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청년정책에 대해 가진 기본 입장 그리고 정당마다 직접 ‘청년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들을 비교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임. 단순한 배점 점수를 매겨 위계를 두기 보다는 각 당의 견해가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른지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함.

○ 비교 · 평가의 대상은 원내외 7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연합당)으로 정함.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원내외 다양한 정당의 정책공약까지 함께 비교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각 당의 답변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하였거나 정책공약집에 수록되어 있는 청년 관련 정책공약 자료로 크게 두 가지이고,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표 1]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 비교 · 평가에 활용된 자료 목록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설명자료” (‘16. 3. 14.)
-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 (‘16. 3. 16. 공문)
- ▶ 각 정당,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 총선 청년정책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16. 3. 21. ~ 23.)
- ▶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6. 3. 18.)
- ▶ 더불어민주당,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16. 3. 18. 보도자료)
- ▶ 국민의당,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청년공약 발표” (‘16. 3. 7. 보도자료)
- ▶ 정의당, “정의당 20대 「청년공약」 개요” (‘16. 3. 15.)
- ▶ 노동당, “[분야별 정책] 청년” (‘16. 3. 7.)
- ▶ 녹색당,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 2.)
- ▶ 민주연합당, “흙수저 방지를 위한 5대 청년 공약” (‘16. 3. 24. 보도자료)

## 2. 총선청년네트워크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

[표 2]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고등교육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비교

질의 항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진짜 반값등록금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부분수용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충), 기회균등장려금제도 도입(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무응답	수용(국가표준등록금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수용	수용	부분수용(등록금 1백만원 상한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부분수용(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수용	수용
고등교육법 개정	입학금·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무응답	부분수용 (입학금 폐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등록금심사위원회 실질화·권한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무응답	부분수용 (등록금 심사위원회 설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사립학교법 개정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책임강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수용(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 국공립 대학과의 통합 지원)	수용	무응답
교육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수용(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무응답

○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질의에 무응답하였고,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은 무응답한 사항도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수용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한편, 청년넷의 정책요구안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반값등록금 부분과 고등교육법 개정 부분에서 부분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음.

○ 특히 각 당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드러났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반면,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은 적극 수용할 의사를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반값등록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3. 각 정당의 20대 총선 고등교육 정책 공약 검토

#### 1) 새누리당

[표 3] 새누리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금리 0.2% 인하 (2.7%→2.5%) 통하여 청년 및 가계 부담 완화 소비자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타 정책자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16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li> <li>-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li> <li>-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이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부담 완화</li> </ul>
마이스터고 활성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기업형 인재 맞춤형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특성화지원법」 제정하여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대학의 장점과 국가지식산업과 연계를 통한 세계적인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li> </ul>

○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가계 대출금리는 3.21%,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9%임. 학자금 대출 금리는 타 대출 금리보다는 낮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청년들로서는 2.7%로 여전히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0.2% 인하는 그야말로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음.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에 한해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청년들에게 체감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고등교육 재정 비중을 GDP 대비 1%까지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4년 4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새누리당의 고등교육 정책은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용자격을 전체 소득으로 확대하여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조정하겠다고 공약에서도 크게 후퇴한 안임. 2014년 기준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42.7%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멀쩡한 세금을 투입하여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홍보만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이 그대로 드러남.

## 2) 더불어민주당

[표 4] 더불어민주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현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배제)</li> <li>-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 검토</li> </ul>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사업 확대</li> <li>-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li> </ul>

○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또한 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고 국가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설정하며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공약임.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또한 교육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고등교육비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땀질 처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연계형 등록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잘 드러나지 않음. 국가장학금 제도도 소득분위 산정의 적절한 기준을 찾지 못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높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임. 또한 2012년 대선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철회한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보임.

## 3) 국민의당

[표 5] 국민의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학자금 이자율 50% 경감	- 학자금 금리 1.2% 인하 (2.7%→1.5%)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법 11조 개정)</li> <li>- 대학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li> </ul>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제도 사각지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운영 : 소득분위산정결과가 낮지만 현실상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실사확인하도록 함</li> <li>- 소득분위산정법의 개선책 강구 : 서민층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금융소득으로 환산시 산정이율을 실제 시중금리로 적용</li> <li>- 교내외 장학금 제도 변경 시 학생대표와 사전협의 및 3개월 전 변경내용 공지</li> </ul>
-----------------------	---

○ 국민의 당은 당장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지보다는 일단 학자금 대출 인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입학금 폐지 등 점진적인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엄청난 학자금 부담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 등록금 심사제도의 경우 현재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각 대학에서 이미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등심위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책설계가 요구됨.

#### 4) 정의당

[표 6] 정의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국가표준 등록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등록금 제도 도입 (가계의 월 가처분소득을 표준등록금으로, 2014년 기준 350만원)</li> <li>-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세와 내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 반값등록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학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에 활용)</li> <li>-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10% 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조치)</li> </ul>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른 기회 대입전형’ 모집인원을 11%에서 20%로 확대</li> </ul>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여러 대학의 연합·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li> <li>-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화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li> <li>-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 학문 특성과 구성원 의사 존중하면서 대학 개편</li> <li>- 교육여건의 법정기준 강화</li> </ul>

○ 정의당의 경우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비교적 다양하고 상세한 정책 구성이 보임. 특히 그동안 다양한 청년·고등교육 관련 단체에서 주장해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을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또한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임.

○ 다만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 어려움. 부실 사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5) 노동당

[표 7] 노동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대학 등록금 무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학 등록금 0원</li> <li>- 모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규직 취업 시까지 0%</li> <li>- 학자금 대출 연체자 전액 탕감 및 미연체자 소득 기준 채무 원금 30-60% 일괄감액</li> </ul>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 국공립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 및 국공립화 지원</li> <li>- '국가책임 교수제' 도입 (교수 확보율 올리고 교육의 질 제고)</li> <li>-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li> <li>-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대학운영 위원회가 대학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 권한 행사</li> <li>- 전문대학의 공교육 강화 체제 개편</li> <li>- 공영형 사립대의 국공립 고등교육기관과의 통합 지원</li> </ul>

○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임. 또한 '국가책임 교수제'를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또한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음.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을 제외한 일반 사립대에 대한 정책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취지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6) 녹색당

[표 8] 녹색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배움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자치를 위한 대학평의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학생 대표의 참석과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겠다.</li> </ul>
학교 서열화 전면 폐지와 학력차별 금지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구축 (대학입학자격고사로 학생선발, 공동 학위 수여)</li> <li>- 사립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 교육과 연구 위한 협력체제 구축</li> </ul>

○ 대학교 무상교육화라는 방향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드러나지는 않음.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공공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학벌 경쟁을 타파하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나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부재는 아쉬움.



## 7) 민중연합당

[표 9] 민중연합당 관련 고등교육 정책공약 정리

구분	세부 공약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li> <li>- 고등교육 예산 GDP 1% 편성</li> <li>- 등록금 자율화 폐지</li> <li>-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 규제</li> <li>-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참가 보장 (학생 참가 기준 50%로 상향, 외부인사 추천 시 학생 동의, 등록금 자료 요청시 공개 법령화, 형식적인 회의일 경우 거부권 인정)</li> <li>- 사립대학의 법정부담전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외조항 삭제</li> <li>- 과도한 대학 적립금 규제 및 법인의 법정부담금 100% 납부 강제</li> <li>-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결혼 시 전액 탕감</li> </ul>

○ 반값등록금 정책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 등록금 자율화 폐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돋보임.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측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책설계에서 현장성과 구체성이 드러남.

○ 다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있지 않고 사립대학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에 비해 그 방안이 다소 모호하며,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의 대출금 전액 탕감의 조건(결혼)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 4. 총평

○ 지금의 청년세대는 최악의 청년실업 속에서 엄청난 고등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적지 않은 빚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음. 학자금 대출의 부담은 청년들의 결혼은 물론 출산 시기까지 늦추는 한편,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음.

○ 2014년 이후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4.4%에서 4.7%로 상승세에 있으며, 졸업 후 3년 내 한 푼도 상환하지 않는 장기미상환자 수도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만 2563명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2015년 대출 잔액은 9조9191억 원으로 2010년(3조6800억원)의 3배에 달함.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임기 내 고등교육 재정 비중을 GDP 대비 1%까지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4년 4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등교육 재정 비중 부분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2016년 4조원 달성, 고등교육 재정 비중은 2015년에 0.56%)

○ 한편 대학들은 12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고 있으면서도 개방이사의 선임이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와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불투명한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입학금 등 기타 납부금을 받고 사용 출처도 밝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도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반의 여당과 제1야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등교육 정책은 모두 지난 총선 또는 대선 때보다 후퇴하였음. 두 당 모두 기존의 정책들을 철회한 것인지, 철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임.

○ 국민의당은 비교적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미 고등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효적인 정책인지 의문이 있으며, 정의당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일반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과 정부의 참여·감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정책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요구보다 진일보한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 문제의식과 방향성, 구체성 등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역시 제원마련 방안,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음.

---

지정토론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

---

지정토론

# 국민의당 채이배 후보

---

---

지정토론

## 정의당 장지웅 후보

---

# 노동당 용혜인 후보

## 노동당의 청년 정책으로 모두의 삶이 변합니다

### 1. 총론

- 오늘날 청년들의 실업, 저임금 불안정 노동, 대출연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IMF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와 삶을 공고하게 만든 기존의 정치에 있다. 정부여당의 청년정책의 주된 특징은 청년 문제를 청년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일자리 문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 확대로 청년 정책으로는 창업지원, 인턴 프로그램, 구직-채용 정보 연결 등으로 접근한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자리를 대폭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
- 잘못된 접근은 청년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청년실업률 통계,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 상황은 점점 최악을 가리고 있다. 체제 차원의 전환이 없으면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 장기 저성장 시대, 이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장기 저성장을 불러온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모두가 안정된 직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소득기반경제로 전환하자, 이를 위해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체제로 전환하자.
-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는 두 정당은 새누리당과 노동당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 체제 확대 혹은 보수해 청년 절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 불안정 노동 체제 종식해 청년의 삶과 꿈을 되찾을 것인가라는 기로에 있다. 노동당은 청년 일자리 단호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정당이다.

### 2. 노동당 청년정책의 특징

청년 문제를 전체 사회문제로 접근한다.

- 일자리: 청년만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권 강화 등 전체 노동시장정책으로 접근. 한마디로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판단.
- 학자금: 대출 정책이 아니라 무상 등록금으로 해결. 무상 등록금은 청년층만이 아니라 가계의 큰 지출 항목을 교육공공성 확보로 해결하려는 접근.

- 청년부채: 생계형 채무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정책에 안에 청년 학자금 연체자를 포함.
- 소득향상: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월 30만원 등 전체 가계의 소득 향상으로 접근.
- 생계비절감: 주거비/교통비/통신비 등 전체 가계의 생계비 절감으로 접근.

청년과 함께 우리의 삶과 꿈을 되찾아오겠다.

- 청년소득효과 100만원로 변화된 삶과 꿈.
-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 알바노동체제 종식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변화된 삶과 꿈.

### 3. 청년 정책 비판

- 청년일자리 기존 정책 비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8조 8천억원임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 위주 취업.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갱신해 12.5%. 해외취업론의 경우, 해외취업에 성공해도 1년 이상을 근무하는 비중 2012년 10.4%에 불과.

- 청년고용할당제 비판: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34세) 의무 고용토록 함. 청년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등 지원 규정 마련(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 운영).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은 2013년 대비 2014년 3,858명(4.8%) 증가, 이는 법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부여되기 전인 2012년-2013년 사이에도 청년채용률은 3% 이상이어서 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1%p(3,000명) 수준, 2014년 청년 실업자는 39만1000명. 따라서 정부가 정책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년고용할당조차 효과가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책과 같이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할당제를 내세우는 것은 부족함.

- 최저임금 비판: 이미 세계 수준에서 뒤처지고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님에도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에 머무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은 안이한 인식.

- 학자금대출 비판: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공유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증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등록금 인상률 억제 등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청년들의 학자금 압박과 대출연체 등이 악화됐다는 것. 학자금 등의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은 10조7,000억 원, 대출자는 152만 명으로 대출 대학생 평균 704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음. 전체 학자금대출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의 수는 2013년말 4만1,691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했고, 대학졸업 채무자 15만1,408명의 27.5%에 이름. 든든학자금 대출자 중 2010년 졸업했으나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대출자가 약 1/3 정도, 즉 든든학자금대출을 받고 졸업한 청년의 1/3이 미취업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을 의미.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과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전환 및 생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햇살론'도

급증, 2015년 고금리 전환대출 389억 원, 생활자금 대출 652억 원. 결국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없이 대출 위주의 정책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과 대출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

- 노동시간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정책처럼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실노동시간 52시간을 지키게 만들겠다는 것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기 어려움. 정의당 정책처럼 상시지속업무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주요 대기업의 사내하청만을 즉각 정규직 전환하는 것으로는 불안정노동체제 종식에 한계. 상시지속업무의 기준을 놓고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나 사법분쟁으로 갈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 장담 어려움,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불법파견 판정에 소요되는 기나긴 사법 과정(현대자동차 사례)을 보건대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움. 특히 주 52시간 초과 노동시간 총합을 52시간으로 나누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이 노동강도 강화나 기계화자동화로 대응한다는 경험을 간과한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로 오류가 있음. 프랑스 오브리법의 결과는 단축되는 노동시간의 약 40% 이상은 기업이 추가고용을 하지 않고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비정규직법 폐지, 주 35시간 노동시간(추가 5시간) 단축, 주 35시간이상 노동자 정규직 간주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전환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가져올 것.

- 주거 비판: 정의당 주거 정책의 경우, 월세 공정임대료에서 '공정'의 기준이 불명확. 공정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면, 현재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이 '시장가격'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주거비 절감대책이 되기 어려움. 또한 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경우, 청년에게 추가의 대출 여력이 있을지. 양질의 공공 주거를 확충하고 전월세값 인상을 통제해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의 5배에 달하는 평균 7.5%의 전월세 전환율, 2.5배로 제한해야. 또한 시·군단위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립. 프랑스나 독일 및 뉴욕의 사례처럼 임차인 대표, 임대인 대표, 공익대표로 구성하고 임대료 상한선 결정 및 고시, 임대료 분쟁의 조정 역할을 맡아야. 예상 효과를 말하자면, 2015년 8월 전국 월세가구당 평균 월세 560,000원이 연리 7.3% 적용 결과이므로 2015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의 2.5배인 3.75%가 월세 상한이 될 경우 가구당 월세 부담액이 약 270,000원 경감.

#### 4. 노동당 청년 정책 전문을 붙임.

##### <노동당 2016년 총선 정책 - 청년>

###### 1) 총론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가 된지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학자금대출로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이전부터 빚더미에 앉은지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배달알바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노동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위한 정책(핵심정책①)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경제침체기에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은 오직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을 해도 노동자의 총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보수정당들이 지금까지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 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우선 채용, 청년구직자에게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등은 결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오직 주당 35시간 법정상한제처럼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공급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총체적인 전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전환의 설계는 핵심정책 ①에서 다루었기에 분야별 정책 청년 편에서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분야별 정책 청년 편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소득과 복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사립대학을 공영형 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는 교육 정책이지만, 이와 같은 교육체계 개편의 일부로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의 무상화는 청년 소득정책이기도 하다. 그밖에 기본복지체계를 통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절감, 청년부채 탕감 등이 소득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최저임금 1만원과 명예근로감독관제 등은 대학생을 포함하여 청년 대다수가 알바노동에 학비나 생계 전반을 의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을 중시하여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청년노동보호정책으로 제시된다.

## 2) 소득보장정책: 모든 청년에게 100만 원 이상의 소득효과

### 1) 기본소득 월 30만원과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 대학생의 60%가 아르바이트노동을 하고 있고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내외인 상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면 45%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22만 5천원의 소득이 늘어남
- 기본소득 매월 30만원과 합산하여 55만 5천원의 소득효과

### 2) 대학등록금 무상화

#### □ 현황

##### • 대학 기능 못하는 사립대

- 일반대 82.5%, 전문대 94.3%가 사립대학이며, 미국 70%, 프랑스 86%, 독일 95%, 이탈리아 93%가 국공립대

- 2014년 현재 사립대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미달 98.3%,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미준수 79.7%,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기준 미달 85.5%,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법정 수익률 미달 81.8%

- 사립대의 '족벌' 지배체제로 각종 비리와 유착이 만연

##### • 사립대 대학등록금 의존율

<2009~2013 등록금 의존율 현황>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2015

- 등록금 의존율은 2009년 대비 2013년 6.5% 인하,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가 등록금 의존율 하락의 주요 이유

- 그러나 등록금 의존율과 별개로 등록금 총액은 같은 기간 5.3% 증가했고,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 (13~09)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9,832,973	10,263,915	10,599,788	10,348,704	10,353,985	521,011	5.3
운영수입(b)	13,713,064	14,298,049	14,830,093	15,524,717	15,875,962	2,162,899	15.8
수입총액(c)	15,551,226	16,392,801	17,540,737	17,975,204	18,236,408	2,685,183	17.3
비율1(a/b)	71.7	71.8	71.5	66.7	65.2	-6.5	-
비율2(a/c)	63.2	62.6	60.4	57.6	56.8	-6.5	-

1995년 2조7,188억원에서 2012년 10조5,513억원으로 7년간 4배 증가, 적립금의 대부분 재원이 등록금 -사립대 연간 등록금 평균은 733만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2011년 감사원은 등록금 881만원의 32.4%인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사립대 2013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5.2%이고, OECD 평균은 고등교육비의 70% 이상을 정부가 부담

• 사립대 개혁의 필요성

-특별 지배체제로 인해 고등교육 기능 부족

-등록금에 의존한 학교운영으로 등록금이 세계 최소 수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할 필요

□ 정책

•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국공립화 지원

-공영형 사립대학의 정의는 OECD 기준으로 대학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는 대학

-정부가 대학 교직원 인건비의 절대액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교수는 '국가책임 교수제도'를 도입하여 교수확보율을 올리고 교육의 질을 제고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학의 국공립화 및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학으로의 통합 등을 지원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목적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대학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 권한 행사

\*전문대학의 공교육 강화 체제 개편

\*공영형 사립대학,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 무상화 지원

\*국가책임교수제도 도입으로 시간강사의 정규직 교수화

\*공영형 사립대의 국공립 고등교육기관과의 통합 지원

• 대학등록금 무상화

-전문대학 포함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0원으로 한다.

-10조 원 정도 예산 소요 추정(2011년 등록금 총액 약 14조 원이며 여기에는 거품이 끼어 있음,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대 계획과 사립대의 이월금 축적 현황, 시간강사의 정규직 교수화, 공영형 사립대학의 단계적 확대 등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연 10조 원 정도면 가능)

• 대학등록금 무상화의 소득효과

-연간 등록금 평균이 732만원이므로 매월 61만원을 절감함

### 3) 청년 생계비 절감

#### □ 현황

##### • 대학생 생활비 등 실태

- 월 평균 생활비는 주거비와 교육비 제외하고 약 40만 원 수준(일부 조사는 66만 원으로 나오기도 함),
- 대학생의 6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알바생들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내외, 알바를 거의 하지 않는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전체 대학생의 월평균 수입은 38만원 수준
- 취업 준비생은 학자금 이외 취업을 위해 외국어, 각종 시험 준비비용, 입사기업 취업준비 비용 등으로 수십만 원 내외의 사교육비 부담
- 아르바이트 이유로 등록금 마련이 70% 정도이나 알바 수입으로는 등록금은커녕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

##### • 주거비·교통비 등

- 서울지역 대학생 52.6% 자취, 경기도 48.7%, 서울 경기 제외 지역 47.9%로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자취 생활
- 서울지역 대학생의 경우 월세 자취 39.4%, 학교직영 기숙사 22.4%, 민자기숙사 7%, 전세 13.2%, 고시원 6.3%, 향토학사 6%, 하숙 5.7% 등의 순
- 주거비용은 자취월세 66만원, 학교직영 기숙사 43만원, 민자기숙사 50만원, 전세 46만원, 하숙 62만원 등
- 전국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로 나타났다. 또 서울 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9.7%로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생활비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은 식비(46.1%), 교통비(16.7%), 문화생활비(13.8%), 데이트비(6.4%), 통신비(5%) 등으로 집계

<대학생들의 생활비 등 현황> \*주거비와 교육비 제외

<표 1>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

(n=865)

구분 (만원)	10미만	10~	20~	30~	40~	50~	100이상	무응답	합계
비율(%)	0.5	1.2	10.2	20.3	16.1	22.8	12.7	15.7	100

<표 2> 응답자의 월 평균 아르바이트 급여

전체 응답자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n=481)

구분(원)	20미 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이상	무응답	합 계
비율(%)	4.4	38.7	24.7	9.4	6.2	13.7	2.7	100

<표 3> 응답자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현황

(n=865)

구분 (만원)	0	10미만	10~	20~	30~	40~	50~	100이상	무응답	합 계
비율(%)	11.7	1.5	4.9	13.6	25.3	15.8	19.0	3.9	3.9	100

□ 정책

• 주거비 절감

-노동당 2016년 총선 <분야별 정책: 주거>에서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로 월세 자취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주거비 절감 기대, 전셋값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기간 10년 보장 정책으로 청년을 포함한 전체 임차 주거인의 주거 안정권 강화

-노동당 2016년 총선 <분야별 정책 :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에서 전체 물량의 30%(30만호)를 매입임대주택 중심으로 만 16~34세 청년에 대해 공급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청년 대표 위원 할당

• **교통비 절감:** 월정액 버스카드제로 교통비 50% 절감 기대(노동당 2016총선 <핵심정책2. 소득기반 경제> 참조)

• **통신비 절감:**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 전국 7만 개 공중전화 무료 와이파이 기지국 활용 등으로 통신요금 절감

• **소득효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매일 최소 1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함

4) 청년부채 탕감

□ 현황

• 금융당국에 ‘청년부채’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부존재

• 학자금 등의 대출 및 연체 현황

-2014년 말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은 10조7,000억 원, 대출자는 152만 명으로 대출 대학생 평균 704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음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에서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으로 직접 대출로 전환한 이후 급증(2010년 3조,7000억 원 → 2014년 10조7,000억 원)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대출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소득 8분위까지 졸업 이후 채무자의 소득이 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이 시작되는 든든학자금대출로 구분

-전체 학자금대출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의 수는 2013년말 4만1,691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했고, 대학졸업 채무자 15만1,408명의 27.5%에 이룸.

-든든학자금 대출자 중 2010년 졸업했으나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대출자가 약 1/3 정도, 즉 든든학자금대출을 받고 졸업한 청년의 1/3이 미취업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을 의미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과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전환 및 생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햇살론’도 급증, 2015년 고금리 전환대출 389억 원, 생활자금 대출 652억 원

-정부는 2014년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5만8,592명의 학자금대출 채권원금 3,031억 원,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채권원금 204억 원에 대해 대출원금 30~50%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또는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 실시.

• 청년부채 탕감 정책의 필요성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OECD 최하위 수준이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폭등을 방지한 결과가 학자금 대출 급증으로 나타남
- 사립대의 2012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10조5,513억원으로 7년간 4배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 재원이 등록금, 이는 2014년 학자금대출 잔액(10조7,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 사립대의 재산 축적에 이용된 꼴
- 잘못된 국가정책과 사립학교법 등의 제도로 경제활동의 진입 초기에 과도한 부채와 연체를 안은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미봉책으로 방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비효율

□ 정책

•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부채 탕감

- <노동당 2016총선 핵심정책2. 소득기반경제> ‘가계부채 탕감’ 정책 관련,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 탕감을 원칙으로 함
- 졸업 이후 연체자가 아닌 학자금대출 채무자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원금에 대해 30~60%를 일괄 감액
-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취업 이전까지 0%로 한다. 단 비정규직은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대학생의 대출 제한

- 대학등록금 무상화 하면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은 폐지된다.
- 대학생 대상 생활비 대출인 햇살론 대출 금지하고, 장학재단이 주거비 등 생활비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직접 대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특별한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

• 예산 추계 = 5년 동안 매년 1조1,100억 원

- 학자금대출 연체자 전액 탕감 : 가계부채 탕감 정책에 책정된 재정 20조 원에 포함됨
- 학자금대출원금 감액 :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년 1조700억 원
-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탕감 : 5년 동안 매년 400억 원(현행 이자율 2.7%)

3) 알바 편에 선 근로감독관

□ 현황

• 청년과 근로감독관

- 대학생 60%가 알바노동, 비대학생의 경우도 시간제 노동(알바)을 하거나 비정규직 사업장에 일하는 비율이 높아 노동자 중에서도 교섭력과 지위가 가장 취약한 계층
-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정이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최저임금법, 임금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등의 노동법 위반 문제에서 감독행정이 중요한 역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사용자 편향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근로감독결과 최저임금 미달(488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278건)으로 총 76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로감독으로

## 적발

-이 가운데 시정지시가 99.3%를 차지하고 과태료 2건에 사법처리 3건 불과

-2014년에는 최저임금 미준수 위반건에 대한 조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는 표시도 있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위반에 해당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적발 역시 2012년 1,892건, 2013년 1,200건, 2014년 832건, 2015년 9월까지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자는 계속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는 2014년 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으로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개정안 제출

### • 근로감독관의 부족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만4,281개 사업장이며 위반 건수는 4만5,861건이다.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수는 1,000여 명으로, 만연한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기에 부족

## □ 정책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시정권고’ 폐지하고 감독관에게 처벌권 부여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일부 조항을 빼고 여러 사안에서 ‘시정권고’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음

-근로감독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집무규정에서 삭제하고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시정’ 이상으로 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처벌 권한 부여

### •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근로감독관 확충의 일환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명예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향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선임하며, 근로감독에 관한 한 근로감독관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

## 4) 고등학교 무상교육

### □ 현황

박근혜 대선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도서지역부터 25%씩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무산된 상태이다. 이로써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됐다.

### □ 정책 :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2017년부터 전면 무상화

• 소요 예산 : 2조545억 원(교육부 예산안)

## 녹색당 신지에 후보

청년 ‘만’을 위한 정책은 없으나, 모두를 위한 정책은 있다.

### 1. 총평에 대하여

녹색당에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없고, 모두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청년을 “청년을 특별히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일부 정당들처럼 청년을 시혜를 베풀어 표를 구걸하려는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자 사회의 일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그 유력한 방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현금 소득입니다. 청년은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아닙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는 다른 계층과 경쟁해야 하는 선별적인 복지 제도와 다릅니다. 한정된 복지 자원에서 청년이 더 받게 되면, 노인에게 주어질 몫이 줄어드는 식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책은 모든 것이 칸막이 쳐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꿰뚫지 못합니다. 한국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사회적인 소득 불균형,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청년 세대를 통해 발현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녹색당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급 제도에 대해서 지지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제도 적용의 우선적 대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청년을 비롯하여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대한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두고 “청년을 특별히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선적인 지급 대상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여러 계층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 자원을 둘러싸고 계층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 2. 고용 관련 발표에 대하여

녹색당의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의 일자리 정책은 다른 여러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녹색당은 자동화, 정보화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수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두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허구적인 이야기와 정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일자리 정책의 해법은 대기업 할당 등이 아닌 대한민국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줄어든 임금은 기본소득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및 사회적 경제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사회적 경제 조직)을 세우고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예컨대,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기준 강화(= 환경설비산업 발전), 자동차 가전제품의 환경 기준 강화(=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 부품생산 중소기업 일자리), 산지보전 규제 강화(= 숲 가꾸기 일자리 증가) 등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시장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임금 노동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귀촌귀농하겠다는 청년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고: 총선청년네트워크 질의서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 중 관련 내용 발췌

□ 청년실업의 원인

- 저성장 시대의 도래 : 저성장은 최근 3년간 0%대 성장이라는 지표로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이며, 이 같은 추세는 이상상태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맞이할 '정상'상태로 감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성장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시대인 것이다. 청년실업은 이와 같은 저성장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녹색당의 기본 입장

- 2016년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경우, 생애를 통해 단 한 번도 낙관적 성장과 안정적인 소득, 시민적 권리를 누려본 적 없는 세대이다. 철저히 사유화 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교육과 취업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가 사회와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할 것이다. 녹색당의 청년정책은 저성장시대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여 견인하는 미래세대를 향해 말을 걸며,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실험으로 청년세대와 한국사회가 신뢰를 기반으로 새롭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도입, 녹색/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당의 대표 정책공약

- 청년배당 실험의 확대와 전면적 기본소득의 도입 :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청년배당 정책을 지원하고, 연구하며, 지역단위의 정책실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겠다.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청년세대'에 대해 우선 지급하겠다.

- 청년세대의 노동권 보장 및 녹색/지역순환경제 일자리 참여 지원 :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배석자 증원, 회의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 녹색 및 지역순환경제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청년세대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

### 3. 교육 관련 발표에 대하여

발표자는 녹색당의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정책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고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정책은 이미 10년 전에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경로까지 제시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가능한 방안입니다. 부디 20대 국회에서는 이 방안이 진지하게 토론되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녹색당은 청년들의 교육 문제가 대학교육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등록금 문제로 자주 환원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 교육의 문제가 대학에 골몰되는 것을 벗어나 때 청년,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당수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으며, 이들에게도 대학교 이외에 고등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지역기반의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대학교육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면, 대학은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 외에도 연구시스템, 학문체계, 노동권 등 다양하고 해묵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학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의 기회를 가져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 총선청년네트워크 질의서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 중 관련 부분 발췌

- 고등교육비 인하를 비롯한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학 비리를 엄벌하는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녹색당은 고등교육 정책 관련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을 구축하는 정책을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으로 통합네트워크를 우선 구성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 다만,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는 대학교육이 과도하게 확장된 것은 아닌지,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방안

- 2003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무한경쟁교육 해결을 위해 제한함

-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학부를 통합하고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

- 이를 통해 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함

---

지정토론

##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

---